

[2024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

지역마다 다르게! 시·군·구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체계 세분화

- 국민 요구에 맞춘 지진 재난문자 개선을 위한 단계적 송출 기준 개선 추진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민에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지진 발생 시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에게 지진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지역에서 지진 규모 3.0 이상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고,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기상청 훈령)

현행 기준으로는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광역적인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했을 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지자체의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상청은 국민 안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에는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송출 범위를 17개 광역시·도에서 250여 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 위해 송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기술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지진 발생 시 자신의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는 지진 진도 개념의 특화된 지진정보를 빠르게 수신할 수 있게 되어, 더 효과적으로 지진 피해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의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 체계로의 전환은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재난 대비를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붙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

담당 부서	지진 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승협 (02-2181-0762)
		담당자	연구관	이희춘 (02-2181-0763)

□ 지진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여 발송

채널명칭	분류기준	휴대전화 알림소리	수신거부
위급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6.0 이상 	휴대전화 최대볼륨 (최소 40dB 이상)	불가
긴급재난	가. 국내지진(남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규모 3.5 이상 ~ 6.0 미만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나. 국내지진(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다. 국외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라. 지진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시, 지진해일경보 발령 시 		가능
안전안내	국내지진(남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지진(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국내지진(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일반문자 알림 설정값	가능

○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국내지진(남한))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0 이상	규모 4.5 이상	전국	
규모 3.5 이상~4.0 미만	규모 4.0 이상~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 km 해당 광역시·도
규모 3.0 이상~3.5 미만	규모 3.5 이상~4.0 미만		반경 50 km 해당 광역시·도